



① 지난 16일 임실군청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운데)와 심민 임실군수 및 참석자들이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하계올림픽 유치 희망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② 같은 날, 순창군민예술회관에서 열린 시군 방문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운데)와 최영일 순창군수 및 참석자들이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임실·순창 핵심 현안,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

김관영 도지사 2026년 시·군 방문 - 임실군·순창군

도민과의 대화서 도민들과 직접 소통, 지역 현안 논의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일환으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6일 임실군과 순창군을 방문, 도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날 오전 임실군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임실군의 핵심현안 사업에 관심을 갖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군청 도착 후 군 의회를 방문해 군 의원들과 환담을 나누며, 임실군 주요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도정 철학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그는 ‘도전경성(挑戰境城): 도전하면 결국 성공한다’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 ‘어민유지(與民有志): 도민과 뜻을 함께 한다’를 주제로 임실군민들과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군민들은 △임실 정주환경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임실엔 치즈 낙농산업지구 지정 △떡거리 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 지원 △체육형 숙박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건의하며 임실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김 지사는 각 현안에 대해 도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후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종사자와 이용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노인 복지 현장의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살폈다.

임실군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약 3% 내외로,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34%를 크게 웃도는 대표적인 초고령 지역이다.

이에 따라 어르신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김관영 지사의 방문은 고령 친화정책과 복지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촘촘한 노인복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임실군의 노인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 재래시장인 임실시장을 찾아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며 민생현안을 살폈다.

이후러 임실군 사회단체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임실군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비밀 일정속에서도 임실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김관영 도지사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임실군 발전과 군민 행복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관영 도지사는 순창군을 방문해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도정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군청을 찾은 김 지사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공무원들의 환영 속에 순창군의회를 방문해 최영일 군수, 손종석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도정 운영 방향과 순창군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장애인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겨 관리를 비롯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를 격려하고 주요 사업 현황을 청취했으며, 시설 이용자와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군민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김지사는 순창군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현장에서 순창군민들은 △인계 임실(군도 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의사 채

용 지원 △유기동물 관리체계 지원, △청년월세 개선 및 취업 멘토링 확대 등을 건의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순창군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지역 발전을 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나눈 소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과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순창시장을 찾은 김지사는 직접 장보기에 나서며 경기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지역 상권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새해를 맞아 순창군을 방문해 주신 데 감사하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순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기자·순창·이양원기자

## “일당 독점 구도 타파” 거리로 간 혁신당 도당

21일까지 도청 사거리 등 거점서 릴레이 1인 시위 중대선거구제 확대 촉구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이 전북 지역의 고착화된 ‘일당 독점’ 정치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전북도당은 지난 14일부터 전주 도청사거리 등 주요 거점에서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 촉구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오는 21일까지 릴레이 형식의 1인 홍보전으로 이어진다.

이번 시민행동은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정치 시위화 폐단을 막고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북도당은 홍보물을 통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의회 지역구의 84.4%가 특정 정당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현행 선거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선거구 조개기’를 즉각 중단하고,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북도당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실시는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지방선거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했던 ‘지방선거 2인 선거구 폐지’ 약속을 언급하며, 거대 양당이 더 이상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치 개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번 시위를 총괄하는 김광석 지방선거 기획단장은 “전북 기초의회의 압도적인 일당 독점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며 “이번 시민행동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국혁신당이 개혁 정당으로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소중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지역 발전에 온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전북의 넓은 정치 문법을 바꾸는 마중물이 되겠다”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전했다. /10만호 기자



## 농식품부, 농림분야 안전사고 예방 위한 종합대책 마련 착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림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난 15일 착수 회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해 12월 30일 농식품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이 농·임업인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구성됐다.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되던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단장으로 총괄·제도반, 농기계 안전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됐다. 각 반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은 물론 농업인과 임업인 단체도 참여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 3특 중추도시도 정부 인센티브에 포함돼야’

김민석 국무총리,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도 “3특 내 중추도시 형성에도 광역 통합 수준 지원 필요”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관련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아닌, 3특 내에서 행정통합을 통해 중추도시를 형성하는 차원의 통합인 만큼 광역 통합에 준하는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실질적인 생활·경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양 시군의 통합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전북권 중핵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어, 완주군과의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중추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도삼배후도시 간 기능연계가 강화되면서 전북 전역의 균형

발전 촉진, 지역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4년 6월 완주군민들이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면서 시작된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전북 전체의 성장축 재편과 정주여건 개선, 혁신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국민권증정부 출범 이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자립적 권역 형성의 시금석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완주와 전주의 행정통합 논의는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을 완성하는 열쇠이며,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3특으로서 광역 통합과 기초 통합 사이에서 중추도시 형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자치체 간 자발적인 통합이 성공하려면 광역단체 못지않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법적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10만호 기자

## ‘2차 종합특검’ 현실화... 김건희 선거개입 등 수사

2차 종합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장 170일·인력 251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방)의 잔여 사건과 기타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을 통과시켰다. 특히 연금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란 협의, 계엄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군사비판 협의,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 등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외환·군사비판 협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계엄 관련 기획·준비 혐의 △인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료비의

혹 △20대 대선 불법 선거캠프 운영 및 종교단체 거대 의혹 △명태연·김진보 선거개입 의혹 등이 법안에 담겼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분수사 90일에 30일씩 수사 기간을 2회까지 연장해 최장 170일 수사할 수 있다. 파견 검사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나, 특검보 5명, 파견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으로 수사 인력은 251명에 달한다. /뉴시스



이철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이 지난 1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9~23일 도정 주요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 혁신도시 악취 해결·전략산업 육성

도, 이번주 도정 주요 일정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가 19~23일 도정 주요 행사와 추진 일정을 공개하며 현장 중심의 도정 운영에 속도를 낸다.

이철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16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도의 다음 주 주요 일정과 중점 추진 현안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먼저 19일에는 K-국정 설명회를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성과와 국정 운영 기초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며,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북도를 방문하여 연설을 할 예정이다.

같은 날에는 심민 소방공무원 임명장 수여식도 열린다. 신규 소방대원 45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24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임용되며, 이날 행사에는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에는 대한전통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정기총회가 라한호텔에서 개최된다.

20일에는 ‘2026 위드 토크데이’ 행사를 통해 출연기관과 혁신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도 열린다.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 1층에서 열리는 이 행사

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3년 차를 맞아 전국 특별자치도 활성화 방안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청년 인구 확대, 저출생 극복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같은 날, 김관영 도지사의 정음시 방문도 예정돼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일정은 21일 예정된 혁신도시 악취 해결 업무협약이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악취 발생지는 김제이지만 피해는 전주시와 완주 지역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모델로, 전주시와 완주가 각각 10%씩 재원을 분담하고 도에서 30%, 김제시에서 50%의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이 광역 지자체 차원의 조정 역할과 협력 행정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21일 오후에는 김관영 도지사의 무주군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22일 오전에는 완주군 방문 일정도 이어진다. 23일에는 김관영 도지사의 고창군과 군산시 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이철규 도 대변인은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도정의 방향과 성과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10만호 기자